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0-25-01 협동보고서 2010-01-01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3차년도)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총괄보고서)

원종욱 외

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협력연구기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25-01 협동연구 2010-01-01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3차년되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총괄보고서)

발 행 일 2010년 12월 저 자 원종욱외 발 행 인 김 용 하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우: 122-705) 전 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처 고려문화사 가 격 5,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ISBN 978-89-8187-741-5 (세트) ISBN 978-89-8187-742-2 94330

性化什

본 협동과제는 2008년도(1차년도)에 시작되어 올해 2010년(3차년도)에 종료되는 연구 사업으로, 사회지출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규명, 사회지출을 구성하는 정책 및 사업의 현황과 수준의 점검, 그리고 사회지출을 경제성장과 선순환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연구를 2008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해 다.

2010년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제비교를 통한 사회서비스 예산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의 「사회자본 효과 분석 및 체계적 지원방안」, 한국노동연구원의 「고용지속형 사회적기업: 모형과발전방향」, 그리고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의 「중산층 추이, 이탈원인과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연구를 통해 미시적인 관점에서 저출산과 빈곤의 세습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아동 관련 지원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과 저소득층의 능력 배양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이 제시되었다. 보다 거시적인 차원의 연구로 제3의 자본으로 평가되고 있는 사회적자본 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 정책방안을 제시하였고, 사회의 안정성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산층의 규모의 변화를 분석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할 수 있는 정책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2010년에 수행된 네 개의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 방안들은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으로 선순환 될 수 있는 영역인 것으로 각 연구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사회지출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거시모델로 분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자료의 사용방법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미시적인 접근에서 개별 프로그램의 저출산고령화와 빈곤의 대물림 현상을 아동복지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완화시키고, 저소득층의 능 력을 배양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시키는데 기여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협동연구 진행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난 3년간 협동연구에 참여해 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노동 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산업연구원,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에 진심으 로 감사드린다.

> 2010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3차년도)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0-25-01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총괄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25-02	국제비교를 통한 사회서비스 예산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25-03	사회적 자본 효과 분석 및 체계적 지원방안	한국교육개발원
10-25-04	고용지속형 사회적기업: 모형과 발전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0-25-05	중산층의 추이, 이탈원인과 대책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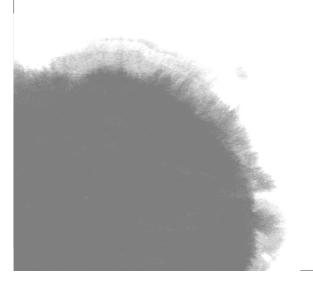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즈라여구		원종욱 연구위원(총괄책임자)	이귀진 연구원	
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종욱 연구위원	윤문구 교수 이귀진 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김대준 선임연구위원	현영섭 연구위원 변종임 연구위원 이덕현 연구원	
협력연구 기관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선임연구위원	어기구 교수 엄형식 연구원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강성진 교수	이우진 교수	

제1장 연구의 배경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목적 4
제3절 협동연구의 필요성5
제2장 연치별 연구내용 9
제1절 연구내용9
제2절 협동연구기관 및 세부연구과제명(2010년도 연구) 12
제3장 연구방법 및 추진일정·······15
제1절 연구방법 15
제2절 연차별 계획(2008~2010년) ······ 16
제3절 추진일정(2009년도 연구)
제4장 2010년도 주요연구 내용 및 결론······ 19
l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9
(국제비교를 통한 사회서비스 예산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II. 한국교육개발원····································
(사회적 자본 수준 정책 분석 및 교육투자 효율화 방안)
III. 한국노동연구원·······43
(고용지속형 사회적기업: 모형과 발전방향)
IV.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51
(중산층의 추이, 이탈원인과 대책)
참고문헌 ······· 63

01

ध्रिश भाष



आर् ल्ट्रा भार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 분배와 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급증하였으나 아직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 특히 양극화 또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인가 부정적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음.
 - 일반적으로 사회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민간부문의 조세부담이 높아져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감소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게 됨.
 - 한편으로는 사회지출 확대는 인적자본의 축적을 통하여 사회적 불평 등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경제성장에 도움 을 줄 수도 있음.
- □ 최근 들어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 등에 기인하는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 따라서 사회지출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양자 간 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제2절 연구의 목적

- □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우리의 현실에 맞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사회지출과 경제성장이 양립가능한지, 필요한 조건은 무 엇인지를 살펴봄.
 -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는 측면까지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함.
- □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정부지출과 경제성장간에는 음(-)의 관계 내지는 통계적으로 비유의적인 관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정부지출과 경제성장간에는 음(-)의 관계가 존재(Alesina and Rodrik 1994; Folster and Henrekson 1999, 2000)
 - 정부지출과 경제성장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음(Agell, et al. 1997, 1999).
- □ 반면 사회지출이 건강증진 또는 인적자본 축적을 통하여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도 있음(Barro and Sala-i-Martin 1995; Bloom, Canning and Sevilla 2001).
- □ 내생적 성장모형에 따르면 생산성 증가율이 경제 내에서 내생적으로 결 정되며 인구증가나 외생적 기술진보가 없어도 경제성장이 가능함.
 - 내생적 성장모형에 투자적 사회지출을 도입하면 생산요소의 질적인 측면을 강화되고 생산성 제고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 할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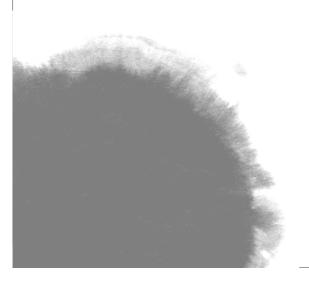
□ 1차 연도의 거시적 분석을 바탕으로 2차 연도에는 사회지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3차 연도에는 효과성 높은 사회프로그램의 확장 및 개발방안을 제시함.

제3절 협동연구의 필요성

-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투자의 관점에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 등과 같은 사회변화에 대응하면서 급증하는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필요성이 대두됨.
- □ 사회투자는 경제학사회학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분이에서 폭넓게 다루 어지고 있는 연구주제임.
- □ 사회지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시각과 접근방식이 사전에 조율되지 않으면 동일한 문제에 대해 상이한 정책대안이 제시되거나 정책 간 상충가능성이 있음.
- □ 연구주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종합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학제 간 또는 해당 분야의 연구자들의 유기적인 협동 연구가 필수적임.

02

아래 연구내용



आरम् ध्रेमष् ध्रेमधः

제1절 연구내용

1. 2008년도 연구내용

- □ 사회지출의 개념 정립
 - 통상적으로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은 이전지출(social transfer)을 의미하나, 학문적 논의나 구제비교를 위해서는 OECD에서 집계하는 복지지출(SOCX)을 사용
 - OECD 기준은 노령, 유족, 무능력,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실업, 주거 및 기타 지출을 포함함.
 - 세부적인 항목 조정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조정
- □ 사회지출과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관한 거시적 분석
 - 사회지출 관련 세부 항목 데이터에 대한 통계분석
 - 주요 경제·사회 관련 변수의 추이 분석 (시계열 분석)
 - OECD 자료를 이용한 비교 분석
 - 확률효과모형 및 고정효과 모형의 비교
 -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전달경로에 관한 기존의 이론 적·실증적 연구를 종합·정리

○ 계량모형을 이용한 사회지출과 경제성장간의 관계 및 장·단기 영향 분석

□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선진국의 성장단계별 사회지출 변화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정 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사회통합과 성장 잠재력 회복에 기여

2. 2009년도 연구내용

- □ 2008년도 거시분석에 근거한 분야별 경제성장기여도와 정성적 평가에 의한 사회지출 우선순위 선정
 - 사회지출은 경제성장에의 기여뿐만 아니라, 성숙한 선진국사회로 진 입하는데 필요한 요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계량적인 측면에서 성장과의 민감도지수와 정성적인 측면에서 선진 국진입에 필요한 정성평가지수로 사회지출의 구성요소를 종합평가함.
 - 정성평가는 OECD의 『Society at Glance』에서 제시된 영역별 구성요소를 설문조사를 통해 영역별 Index화
 - 사회지출의 정성평가는 사회의 결속력(Social Cohesion)강화영역, 안정적인 인구의 재생산(re-production)영역, 안정된 사회구축영역 등으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 지표별로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지출의 프로그램별 사회적 당위성을 지표화 함.
- □ 사회지출을 구성하는 요소를 프로그램별로 구분하고, 경제성장 기여도와 의 연계구조를 분석함.
 - 2008년도의 거시분석은 사회지출의 대항목에 대한 거시변수와의 상 관관계를 실펴보는 것이므로, 대항목내의 세부프로그램과 대항목간의 연계분석은 실시하지 못함.

- 사회지출의 대항목과 경제변수간 경로와, 대항목내 소항목(세부프로 그램)과 대항목간 경로일치성을 평가하여 기여도를 평가
 - 소항목(세부프로그램)의 시업목적 및 성과를 바탕으로 경로일치성을 평가함.
 - 소항목에 포함된 개별 사업의 연차별 실적을 계량화하여 소항목의 실질적 기여를 평가함.
- 대항목과 경제성장 또는 거시변수와의 연계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는 소항목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지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함.
- □ 정성적 평가와 계량적 평가를 바탕으로 사회지출구성 소항목의 지출우 선 순위를 선정

3. 2010년도 연구내용

- □ 2009년 연구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영역에 대한 세부프로그램 개발연구
 - 2009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성적, 계량적 기여가 높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기존 프로그램의 확장방안 또는 신규 프로그램의 개발을 추진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와의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비교 연 구를 통해, 정성적, 계량적 효과가 높은 프로그램의 확장 또는 신규 프로그램의 개발을 추진
 -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Pilot 프로그램운영을 통해 정책효과성을 평가함.
- □ OECD의 사회지출통계와 주요 선진국의 예산내역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와의 사회서비스부문에서의 격차를 분석함.
 - OECD 사회지출통계는 GDP 대비 비율로 국가간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가간 격차의 원인에 대해서는 엄밀한 연구가 된 적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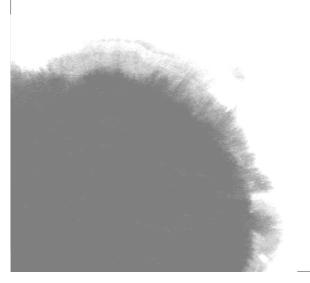
- OECD 사회지출통계상 사회서비스에 대한 통계는 별도로 작성되지 않지만 in-kind성격의 지출을 광의의 사회서비스지출로 보는 경우, 이에 대한 국가간 격차도 확인이 가능함.
-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예산을 분석하여 거시적 통계에서 발생하는 차이점을 분석함.
 - 사회복지예산 중 in-kind성격의 예산을 광의의 사회서비스예산으로 간주하고 각국의 예산항목과 금액을 비교분석함.
- 실시하지 않고 있는 프로그램의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의 추계를 실 시하고 이에 따른 사회지출의 GDP대비 비중의 변화를 계산함.
- □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의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계함.
 -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의 확대는 현금지원과는 달리 서비스공급자와 관련 인력이 필요하므로 고용효과 등의 일부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 산함.

제2절 협동연구기관 및 세부연구과제명(2010년도 연구)

참여기관	세부연구과제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비교를 통한 사회서비스 예산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사회적 자본 효과 분석 및 체계적 지원방안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지속형 사회적기업: 모형과 발전방안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중신층의 추이, 이탈원인과 대책	

03

धराष्ट्रं पुरुष्ध



제3간 연구방법 및 추진역정

제1절 연구방법

- □ 기관 학제간 협동연구. 연구기관과 학계의 책임연구자간 토론을 정례화 하여 연구 방향 및 방법론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책대안을 도 출하도록 함.
- □ 문헌연구와 실증연구 병행: 주제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함:
- □ 연구자문그룹과 전문가 포럼 운영: 사회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는 범위 가 넓은 연구주제이므로 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자문그룹과 주제별 전문가 포럼 등을 운영하여 지식과 경험을 연구에 반영토록 함.
- □ 국제적 협동연구. 사회지출에 관한 연구를 축적하고 있는 해외기관과의 학술적 교류를 통하여 그들의 축적된 연구성과와 정책시례를 우리나라 에 활용토록 함.

제2절 연차별 계획(2008~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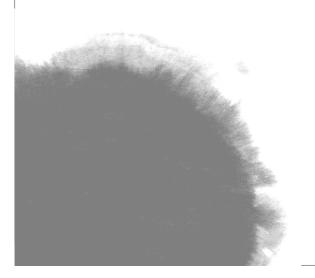
연차	연구과제
2008년 (1차년)	사회지출과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기초 연구 및 거시모형 분석
2009년 (2차년)	사회지출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미시모형 연구
2010년 (3차년)	사회투자의 세부 프로그램 개발연구

제3절 추진일정(2009년도 연구)

일정	추진내용		
2월	- '08년도 최종 연구계획서 제출		
3월	- 협동연구기관 간 연구방향 및 일정 협의 - 연구진 워크숍(주요 쟁점관련 기존연구 발표 및 토론)		
5월	- 총괄책임자 및 세부과제 책임자 간담회(1차) - 연구책임자 및 과제별 공동연구자 간담(1차)		
7월	- 중간평가 워크숍(과제별 연구진행 점검 및 내용 협의)		
8월	- 총괄책임자 및 세부과제 책임자 간담회(2차) - 연구책임자 및 과제별 공동연구자 간담회(2차)		
9월	- 심포지엄용 원고 취합 - 심포지엄 개최		
10월	- 연구기관별 보고서 취합 - 연구결과 상호검토를 위한 워크숍 - 종합보고서 편집회의		
11월	- 연구평가회의 - 연구결과 최종 취합 및 정리		
12월	- 최종보고서 출판		

04

2010년도 주요연구 내용 및 검토



제4전 2010년도 주요연구 내용 및 7론

1. 한국보건시회연구원

- 국제비교를 통한 사회서비스 예신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제1장서론

제2장 OECD 국가의 보건복지 예산 구성

- □ OECD SOCX 기준에 의한 우리나라의 사회지출규모는 GDP 대비 OECD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며, OECD 평균이 22.3%인 반해 우리나라는 2007년 기준으로 10.2%로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함.
 - 우리나라의 사회지출규모가 적은 것은 우리나라의 연금제도가 아직 성숙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국민연금제도의 성숙도를 2030년으로 가정한다면 추가로 5.13%가 늘어나 GDP대비 15.33%가 되며, 국민연금제도의 성숙도를 2040년 수준으로 가정한다면 GDP대비 19.88%에 근접하게 됨.
 - 따라서 연금제도의 성숙도를 2040년 수준으로 가정한다면 우리나라의 사회지출의 GDP대비 비중은 체코, 아이슬란드, 호주에 근접하게 됨.

- 사회지출의 GDP비중의 규모와 사회서비스지출비중 간에는 어떠한 추세도 나타내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 아동에 대한 현금급여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로 연간 \$ 3,846 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연간 \$3,000 이상을 지급하는 국가는 호주,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등이며, \$2,000 이상을 지급하는 국가는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이 포함됨.
 - 노르웨이, 스위스, 스웨덴, 영국, 슬로바키아 등도 \$1,987, \$1,950, \$1,865, \$1,883, \$1,898 을 각각 지급하여 거의 \$2,000 수준에 근접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자산조시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는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위스,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사이프러스,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에니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등이 포함됨.
 - 주요 국가의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TFR을 살펴보면 0.3이상 증가한 국가, 0.2~0.3미만으로 증가한 국가, 0.2미만으로 증가한 국가, 그리고 감소한 국가 등으로 4개 그룹으로 분류됨.
 - 스웨덴, 체코, 영국이 0.3이상 TFR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OECD 30개 국가 중에서 2000년에서 2008년까지 8년 동안
 TFR이 증가한 국가는 23개국이고 감소한 국가는 한국, 캐나다,
 독일, 스위스,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등 7개국임.
 - 독일과 룩셈부르크는 기족에 대한 사회지출의 GDP 비중이 각각 3.1%, 3.8% 로 높은 국가군에 속하나 TFR은 오히려 감소함.

〈표 1〉 주요국가의 TFR, 보육부담, 아동의 거주형태

국가	TFR (2008-2000)	기족에 대한 각종공공지출 ¹⁾ 의GDP비중	가구보육의 선비용 평균임금비중	0~14세 이동의 양부모 거주비율	0~14세 이동의 한부모 거주비율
호주	0.213	2.9	13		
오스트리아	0.047	2.9	19	71.5	9
벨기에	0.096	3.15	5	66.7	15.7
캐나다	-1.488	1.2	29		
체코	0.353	2.27	10	76.8	11.6
덴마크	0.121	3.2	8		
핀란드	0.121	3	9		
프랑스	0.124	3.8	15	79.8	13.4
독일	-0.003	3.1	9	78.2	13.3
그리스	0.246	1.1	7	84.5	4.1
헝가리	0.020	3.15	8	71.7	8.6
아이스란드	0.064	3	20		
아일랜드	0.200	2.6	45		
이태리	0.154	1.3			
일본	0.010	1.35	20	70	6.2
 한국	-0.275	0.25	13		
룩셈부르크	-0.180	3.8	9	84.4	6.8
멕시코	-0.666	0.5		67.9	7.5
네덜란드	0.050	2.3	14	84.8	11.4
뉴질랜드	0.203	2.65	36		
노르웨이	0.109	2.95	10		
폴란드	0.023	1.2	5		
포르투갈	-0.188	1.65	6		
슬로바키아	0.028	2.2	11	60.8	4.9
스페인	0.226	1.15		75.1	5.8
스웨덴	0.363	3.2	8		
스위스	-0.016	1.4	39		
영국	0.320	3.6	43	65.8	23.8
미국	0.030	1.35	27		
OECD-30	0.062	2.3	17		

주: 1) 현금급여, 서비스급여, 조세혜택 등을 포함함.

자료: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 2000년 TFR과 2008년 TFR의 차이를 기족에 대한 사회지출의 GDP비중, 가구의 보육 순비용의 평균임금 비중, 그리고 0~14세 아동의 양부모거주비율 등의 자료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비의 GDP 비중만이 TFR 변화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2〉TFR 증가수준과 각종가족관련 급여변수와의 상관관계

		TFR (2008-2000)	기족에 대한 사회지출의 GDP비중	기구보육 순비용의 평균임금비중	0~14세의 양부모거 주비율
TFR	Pearson Correlation	1	.409(*)	087	249
(2008-2000)	Sig. (2-tailed)		.028	.671	.263
	N	30	29	26	22
기족에 대한	Pearson Correlation	.409(*)	1	066	340
사회지출의	Sig. (2-tailed)	.028		.747	.131
GDP비중	N	29	29	26	21
까	Pearson Correlation	087	066	1	301
보육순비용의	Sig. (2-tailed)	.671	.747		.224
평균임금비중	N	26	26	26	18
0~14세의	Pearson Correlation	249	340	301	1
양부모거주비율	Sig. (2-tailed)	.263	.131	.224	
-	N	22	21	18	22

주: 1)*: 0.05 수준에서 유의함! (2-tailed).

-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의 구성에 따라 TFR증가가 달리 나타나는지를 분석해 본 결과, 사회지출의 구성과 TFR과는 일정한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음.
 -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의 증가는 TFR증가에 기여는 하지만 그 구성은 TFR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TFR과 공공지출 유형

TFR 증가 규모별 국가군	국가	TFR증가 (2008-2000)	기족에 대한 공공지출의 GDP비중	공공 지 출유형
	스웨덴	0.3630	3.2	①,②균형
0,30 상 증가	체코	0.3530	2.27	①,②,③균형
	영국	0.3200	3.6	①중심
	그리스	0.2456	1.1	①,②균형
	스페인	0.2260	1.15	②중심
0.20 상 증가	호주	0.2130	2.9	①중심
	뉴질랜드	0.2034	2.65	①중심
	아일랜드	0.2000	2.6	①중심
	이태리	0.1540	1.3	②중심
	프랑스	0.1241	3.8	①,②,③균형
	덴마크	0.1212	3.2	①,②균형
	핀란드	0.1210	3	①,②균형
	노르웨이	0.1090	2.95	①,②균형
	벨기에	0.0965	3.15	①,②,③균형
O Oplat 조기	아이스란드	0.0640	3	②중심
0.2미만 증가	네덜란드	0.0500	2.3	①,②,③균형
	오스트리아	0.0465	2.9	②중심
	미국	0.0295	1.35	②,③균형
	슬로바키아	0.0285	2.2	①중심
	폴란드	0.0230	1.2	①중심
	헝가리	0.0200	3.15	①,②균형
	일본	0.0100	1.35	①,②,③균형
	독일	-0.0025	3.1	①,②,③균형
	스위스	-0.0163	1.4	①중심
	룩셈부르크	-0.1800	3.8	①중심
감소 국가	포르투갈	-0.1883	1.65	①,②균형
	한국	-0.2750	0.25	②중심
	멕시코	-0.6660	0.5	②중심
	캐나다	-1.4880	1.2	①중심

①: 현금급여지출, ②: 서비스지출, ③: 조세혜택

제3장 미국 보건복지 예산 구성

□ 미국의 보건복지예산은 크게 8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복지부문은 아동가족과 노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임.

〈표 4〉미국 보건복지부 사업부문별 예산규모

(단위: 백만 \$ US)

소관부서	예산금액	비중
FDA	3,284	0.53%
CDC	10,521	1.70%
NIH	31,239	5.05%
HRSA	7,482	1.21%
SAMHSA (약물중독 및 정신질환)	3,431	0.55%
CMS(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511,033	82.4%
ACF(기족이동)	51,624	8.34%
AA(노인)	1,519	0.24%
총 계	620,134	100%

주: ATSDR: 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 HRSA: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자료: U.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www.budget.gov

○ 미국의 사회복지관련 예산은 아동가족부문과 노인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미국의 아동가족청의 주요 예산항목은 다음과 같음.

(표 5) 미국 아동가족청 예산주요항목(2010년 기준)

예산항목	금액	비중
요보호가정에 대한 한시적지원(TANF)	17,058	32.941%
주정부에 대한 FOSTER CARE 와 입양지원	7,381	14.253%
Head Start	7,234	13.971%
저소득가정 에너지보조 프로그램	5,100	9.848%
아동보호정책 집행 및 기족보호프로그램에 대한 주정부 지원금	4,997	9.651%
보육개발기금	2,917	5.633%
보육 및 보육개발 BLOCK GRANT	2,127	4.108%
사회사비스 BLOCK GRANT	1,700	3.283%
지역서비스 프로그램	772	1.492%
안전하고 안정적인 기정촉진지원금.	380	0.734%
아동복지프로그램	346	0.670%
발달장애	169	0.327%

예산항목	금액	비중
기정폭력 및 강력범죄예방	133	0.257%
기출 및 노숙청소년 프로그램	97	0.189%
이동학대방지 프로그램(Abase Programs)	97	0.188%
안전하고 안정적인 가정육성	63	0.122%
이동연구 및 기술지원	57	0.112%
수감 중인 아동의 멘토링	49	0.095%
Chafee 교육 및 훈련 바우처	45	0.088%
입양인센티브	39	0.076%
사회서비스 연구 및 사례	25	0.049%
기출 및 노숙청소년 성학대예방 및 교육 지원금	17	0.035%
장애인의 투표접근성제고	17	0.034%
이동건강법안 프로그램	12	0.025%
재난서비스 사례관리	2	0.004%
기타	454	0.882%
	51,299	100%

- 노인서비스 예산은 미국노인인구(60+)의 약 20%에 달하는 11백만 명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미국노인인구는 2010년 57백만 명에서 2015년 65.7백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26%(148만)가 독거 노인으로 조사되고 있음.
 - 이들 인구의 상당수는 양로원입소의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며 약 3백만 명에게는 집중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중 500,000명은 양로원(Nursing Home)입소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노인서비스는 이들 노인들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양로원입소와 의료적 치료를 예방할 수 있도록 Critical Support를 제공함.

(표 6) 노인부문 사업별 실적건수

지표	2009년 실적	2010년 실적	2011년 목표
단체급식건수	94.2백만	92.4백만	84.1백만 (1.6백만명)
기정배달급식건수	146백만	136.5백만	130.1백만 (909,000명)
교통서비스건수	28.3백만	25.5백만	28.5백만
개인, 가시서비스, 심 부름 서비스건수	32.9백만	31.8백만	33백만
Day Care/Day Health건수	9백만	8백만	9.1백만
 시례관리서비스건수	4.4백만	4.2백만	4.4백만
보호자 지원안내서비스건수	1.3백만	1.2백만	1.6백만
보호자에 대한 카운셀링 및 교육(인원)	153,148명	137,000명	186,000명
보호자안식서비스(명/시간)	75,687명 (10백만시간)	74,000명	92,000명

자료: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on Aging Fiscal Year 2011, 「Justification of Estimates for Appropriations Committees」

〈표 7〉 미국 보건복지부 노인부문 사업별 예산

(단위:천 불)

사업내용	2009 회계연도	2010 회계연도 추정	2011 예산요청안
1. 건강 및 지립(Health and Independence):	\$	\$	\$
1) 가정과 지역사회기반지원서비스	361,348	368,348	416,348
2) 노인영양서비스(Congregate Nutrition Services)	434,269	440,783	445,644
3) 기정배달영양서비스	214,459	217,676	220,893
4) 미국원주민영양 및 지원서비스	27,208	27,708	29,708
5) 영양서비스 인센티브프로그램	161,015	161,015	161,015
6) 예방보건서비스	21,026	21,026	21,026
2. 돌봄서비스(Caregiver Services):	\$	\$	\$
1) 가정돌봄지원서비스	154,220	154,220	202,220
2) 미국원주민돌봄지원서비스	6,389	6,389	8,389
3) 알츠하이머지원서비스	11,464	11,464	11,464
4) Caregiver 일시 인식서비스(Lifespan Respite Care)	2,500	2,500	5,000
3. 위험에 노출된 노인보호:	\$	\$	\$
1) Long-Term Care 옴부즈맨 프로그램	16,327	16,827	17,783
2) 노인학대 및 방치예방	5,056	5,056	5,507

시업내용	2009 회계연도	2010 회계연도 추정	2011 예산요청안
4. 네트워크지원 및 시범:	\$	\$	\$
1) 보건 및 Long-Term Care <u>프로그</u> 램	28,000	30,589	30,485
2) <u>프로그</u> 램혁신	18,172	19,023	13,049
3) 고령화네트워크지원활동	13,694	13,694	13,694
5. <u>프로그</u> 램 행정	18,696	19,979	22,508
시업예산 총계	1,493,843	1,516,297	1,624,733
6. 헬스케어관련 사기 및 남 용통 제	3,236	3,289	3,279
7. 메디케어등록지원	17,500	-	-
프로그램단위 총예산	1,514,579	1,519,586	1,628,012
Total, FTE	103	108	112

제4장 일본 보건복지 예산 구성

- □ 일본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의료관련 지출이 높으며, 복지관련은 사회보 장관계예산의 18.8%를 차지함.
 - 아동기족관련 예산은 23,115억 엔으로 전체복지예산의 45.5%를 차지

〈표 8〉 일본의 후생노동성 일반회계예산안 사회보장관계비 내역

(단위: 억엔)

대항목	2009년도 예산	2010년도 예산	증감액
연금	98,702	101,354(37.4%)	2,652
의료	90,252	94,594(34.9%)	4,342
 개호	19,699	20,803(7.7%)	1,104
복지 등	35,937	50,780(18.8%)	14,842
고용	1,931	3,262(1.2%)	1,331
사회보장관계비: 총계	246,522	270,793(100%)	24,270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예산안

○ 일본은 10개의 핵심정책영역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미국의 아동가족청의 예산과 비교기능한 영역은 1)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정비, 6) 장애자 지원의 종합적인 추진의 일부사업, 9) 생활 안심확보의 일부사업 등이 포함됨.

(표 9) 일본의 아동기족관련 예산내역

(단위: 백만엔)

				(인기, 액인엔)
대항목	주요시항	2009년도 예산액	2010년도 예산액	증감액
	1) 자녀수당 창설(신규)	-	1,472,228	1,472,228
	2) 편부·편모가정에 자립지원책 충실	175,416	200,120	24,704
안심하고	3) 대기이동해소를 위한 보육 서비스 충실 등	377,805	415,522	37,717
자녀를 키울 수	4) 모든 육아기정에 대한 지역육아지원대책 충실	44,660	41,459	△3,201
기술 ㅜ 있는	5) 아동학대에의 대응 등 요보호아동대책 등 충실	92,624	94,706	2,082
^^_ 환경정비	6) 모자보건의료대책 충실	23,475	31,750	8,275
	7) 출산의 경제적 부담 경감	7,934	18,162	10,228
	8) 일과 가정 양립지원	9,955	9,773	△182
장애자 지원의 종합적인 추진	1) 발달장애자 지원시책 추진		749	
생활	1) 지역복지 재구축		24000	
안심확보	2) 민간단체의 복지활동진흥에 지원		3047	
	총계		2,311,516	
	·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예산안

- 일본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정비'를 위해 예산을 책정한 것은 다음 세대의 사회를 짊어지는 아동 1명의 육이를 사회 전체에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육아와 출산에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 등 종 합적인 소자화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0년부터 자녀수당제도를 신설하였음.

- 2010년도 자녀수당예산은 1조 4,722억 엔으로 가족관련 예산에서서 비중이 가장 큰 항목임.
- 중학교 수료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월액 13,000엔을 지급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일본의 노인부문 예산은 고연령자취업기회확보사업, 고령자 등의 고 용안정·촉진에 필요한 경비, 고령자 개호예방·건강만들기 등에 필요 한 경비, 고령자 일상생활지원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구성되 어 있음.

〈표 10〉고연령자취업기회확보사업

(단위: 엔)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대항목	주요사항	2009년도 예신액	2010년도 예신액	증감
048 고령자 등 고 용인전·촉진비	06 고연령자취업기회확보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	25,720,120	322,319,467	296,599,347
	95 고령자 등의 고용안 정·촉진에 필요한 경비	857,224	760,922	96,302

〈표 11〉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촉진에 필요한 경비

(단위: 엔)

				(단위. 엔)
대항목	주요사항	2009년도 예산액	2010년도 예신액	증감
081 고령자일상생 활지원 등 추진비	04 고령자 개호예방·건강 만들기 등에 필요한 경비	75,792,560	74,308,316	1,484,244
	95 고령자 일상생활지원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	278,361	245,042	33,319

제5장 한국 보건복지 예산 구성

□ 201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재정 규모는 31조 2,254억원이며 '총지출' 은 '09 본예산(28.36조원) 대비 10.1%(2.9조원) 증가하였음.

〈표 11〉 분야별 세출 예산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인전)	
'09	예산	'10 예산 (C)	즈 가		즈카 ┌──		
본예산 (A)	추경 예산 (B)		등 급 (C-A)	%	(C-B)	%	
18,605,936	19,899,843	19,928,543	1,322,607	7.1	28,700	0.1	
18,435,501	19,709,983	19,585,487	1,149,986	6.2	△124,496	Δ0.6	
13,416,188	14,568,391	14,387,648	971,460	7.2	△180,743	Δ1.2	
7,135,490	7,973,099	7,297,260	161,770	2.3	△675,839	△8.5	
4,073,527	4,124,213	4,437,637	364,110	8.9	313,424	7.6	
280	280	395	115	41.1	115	41.1	
1,830,041	1,838,316	2,207,461	377,420	20.6	369,145	20.1	
376,850	632,483	444,895	68,045	18.1	△187,588	△29.7	
5,019,313	5,141,592	5,197,839	178,526	3.6	56,247	1.1	
841,593	963,872	878,288	36,695	4.4	△85,584	△8.9	
4,177,720	4,177,720	4,319,551	141,831	3.4	141,831	3.4	
170,435	189,860	343,056	172,621	101.3	153,196	80.7	
98,413	117,838	115,212	16,799	17.1	△2,626	△2.2	
72,022	72,022	227,844	155,822	216.4	155,822	216.4	
281,517	281,517	259,416	△22,101	△7.9	△22,101	△7.9	
46,479	46,476	34,530	△11,949	△25.7	△11,949	△25.7	
	본에산 (A) 18,605,936 18,435,501 13,416,188 7,135,490 4,073,527 280 1,830,041 376,850 5,019,313 841,593 4,177,720 170,435 98,413 72,022	(A) (B) 18,605,936 19,899,843 18,435,501 19,709,983 13,416,188 14,568,391 7,135,490 7,973,099 4,073,527 4,124,213 280 280 1,830,041 1,838,316 376,850 632,483 5,019,313 5,141,592 841,593 963,872 4,177,720 4,177,720 170,435 189,860 98,413 117,838 72,022 72,022 281,517 281,517	본에산 (A) 추경 에산 (C) 18,605,936 19,899,843 19,928,543 18,435,501 19,709,983 19,585,487 13,416,188 14,568,391 14,387,648 7,135,490 7,973,099 7,297,260 4,073,527 4,124,213 4,437,637 280 280 395 1,830,041 1,838,316 2,207,461 376,850 632,483 444,895 5,019,313 5,141,592 5,197,839 841,593 963,872 878,288 4,177,720 4,177,720 4,319,551 170,435 189,860 343,056 98,413 117,838 115,212 72,022 72,022 227,844 281,517 281,517 259,416	본에산 (A) 추경 예산 (C) 수 함 (C-A) 18,605,936 19,899,843 19,928,543 1,322,607 18,435,501 19,709,983 19,585,487 1,149,986 13,416,188 14,568,391 14,387,648 971,460 7,135,490 7,973,099 7,297,260 161,770 4,073,527 4,124,213 4,437,637 364,110 280 280 395 115 1,830,041 1,838,316 2,207,461 377,420 376,850 632,483 444,895 68,045 5,019,313 5,141,592 5,197,839 178,526 841,593 963,872 878,288 36,695 4,177,720 4,177,720 4,319,551 141,831 170,435 189,860 343,056 172,621 98,413 117,838 115,212 16,799 72,022 72,022 227,844 155,822 281,517 281,517 259,416 △22,101	본에산 (B) 10 에산 (C-A) % 18,605,936 19,899,843 19,928,543 1,322,607 7.1 18,435,501 19,709,983 19,585,487 1,149,986 6.2 13,416,188 14,568,391 14,387,648 971,460 7.2 7,135,490 7,973,099 7,297,260 161,770 2.3 4,073,527 4,124,213 4,437,637 364,110 8.9 280 280 395 115 41.1 1,830,041 1,838,316 2,207,461 377,420 20.6 376,850 632,483 444,895 68,045 18.1 5,019,313 5,141,592 5,197,839 178,526 3.6 841,593 963,872 878,288 36,695 4.4 4,177,720 4,177,720 4,319,551 141,831 3.4 170,435 189,860 343,056 172,621 101.3 98,413 117,838 115,212 16,799 17.1 72,022 72,022 227,844 155,822 2164 281,517 281,517 259,416 △22,101 △7.9	109 에산 10 에산 (C) 중감 (C-A) % 중감 (C-B) (C-B) 18,605,936 19,899,843 19,928,543 1,322,607 7.1 28,700 18,435,501 19,709,983 19,585,487 1,149,986 6.2 △124,496 13,416,188 14,568,391 14,387,648 971,460 7.2 △180,743 7,135,490 7,973,099 7,297,260 161,770 2.3 △675,839 4,073,527 4,124,213 4,437,637 364,110 8.9 313,424 280 280 395 115 41.1 115 1,830,041 1,838,316 2,207,461 377,420 20.6 369,145 376,850 632,483 444,895 68,045 18.1 △187,588 5,019,313 5,141,592 5,197,839 178,526 3.6 56,247 841,593 963,872 878,288 36,695 4.4 △85,584 4,177,720 4,177,720 4,319,551 141,831 3.4 141,831 170,435 189,860 343,056 172,621 101.3 153,196 98,413 117,838 115,212 16,799 17.1 △2,626 72,022 72,022 227,844 155,822 2164 155,822 281,517 281,517 259,416 △22,101 △7,9 △22,101	

○ 한국의 보육기족 부문의 2010년 예산액은 22,074백만 원으로 2009년 에 18,300백만 원이던 것에 비해 20.6%가 증가되었음.

- 보육기족 부문의 14가지 항목 중에서 앞의 미국과 일본의 보육기족 부문과 비교해 볼 수 있는 항목은 5가지임.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보육돌봄 서비스, 위기가족 역량 강화 및 자녀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보조) 등
- □ 한국의 노인 부문 예산은 2010년 3,499,161백만 원으로, 2009년 3,123,696백만 원에 비해 약 11.9% 증가하였음.
 - 미국과 일본의 예산과 비교할 수 있는 프로그램영역은 우리나라의 노인돌봄서비스부문임.
 - 첫 번째,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요양서 비스가 불필요한 독거노인으로 서비스 내용은 월 4시간의 가정 방문, 유선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임.
 - 두 번째,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며 서비스 내용은 신변·활동 지원, 가사·일상생활 지원, 건강관리 서비스 등임.
 - 세 번째는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은 독거노인의 고독사 방지 등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 출입, 가스유출, 화재를 감지하는 센서를 집안에 설치해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응급시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하는 신개념 서비스임.
- □ 한국의 아동부문 예산은 2010년 161,532백만 원으로 '09년 174,132백만 원에 비해 약 7.2% 감소하였으며, 청소년부문의 2010년도 예산은 2009년 82억에서 2010년 60억으로 22억이 감소하였음.
 - 아동 부분에서는 미국의 HeadStart 와 유사한 사업으로 드림스타트 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부문에서는 청소년폭력 및 가출예방이 비교 가능함.

⟨표 12⟩ 한국의 아동 부문 예산

(단위: 백만원)

		'09예산	'10예산	증 감	간위: 백만원)
대항목	주요시항	(A)	(B)	(B-A)	%
	1. 요보호아동 보호육성	77,525 (78,625)	36,224	△41,301 (△42,401)	△53.3 (△53.9)
	- 아동시설 지원	55,228 (56,328)	11,598	△43,630 (△44,730)	△79.0 (△79.4)
	- 학대·실종이동 보호지원	5,091	7,029	1,938	38.1
이동 부문	- 기정입양지원	9,280	9,307	27	0.3
	- 기정위탁지원	1,356	1,720	364	26.8
	- 이동발달지원 계좌 지원	6,570	6,570	-	-
	2. 이동복지지원	96,607 (106,397)	125,308	28,701 (18,911)	29.7 (17.8)
	- 방과후 활동지원	74,062 (83,852)	95,199	21,137 (11,347)	28.5 (13.5)
	- 드림스타트 지원	22,545	30,109	7,564	33.6
	Л	174,132	161,532	△12,600	△7.2
		(185,022)		(△23,490)	(△12.7)

자료: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개요, 2010.1.

- □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사업은 네 가지 유형의 바우처사업으로 대변되고 있음.
 -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그리고 지역사 회서비스혁신사업 등이 제1단계 바우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바우처사업과 함께 대표적인 사회서비스사업으로는 각종 보육료 지 원사업이 있음.
 - 특정 기준의 소득계층 이하 아동의 보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모의 보육료를 부모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 하고 있음.

- 2009년 7월부터는 새로운 보육료 지원대상 기준소득 및 선정기 준이 적용되어 영유아기구 소득 하위 50%까지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 전액을 지원하고, 하위소득 50%를 초과하고 60%까지는 기준단가의 60%, 하위소득 60%를 초과하고 70%까지는 기준단가의 30%를 지원하고 있음.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 미국의 아동·가족부문예산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특히 일하는 취약계층의 부모를 위해 보육서비스, TANF, HeadStart 등을 통해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음.
 - 또한 가정 내에서 아동이 학대를 받거나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사례가 발생할 경우 Foster Care나 입양 등을 통해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일본의 이동 가족부문예산은 저출산극복(소자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2010년부터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여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미국과는 달리 아동학대예방, 입양, Foster Care에는 상대적으로 정 책적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 한국의 아동·가족부문예산도 일본과 유사하게 저출산극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일본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예방, 입양, Foster Care에는 상대적으로 정책적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 미국의 노인부문예산은 의료비(Medicare)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노인서비스 부문은 문화의 특성상, 독거노인이 많은 것을 반영하고 있어 노인의 급식, 교통편의, 건강관리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 일본의 노인부문예산도 개호보험 등을 포함하여 의료비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미국과 차이점은 노인일자리 관련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임.
 - 미국은 은퇴 후 봉사활동을 전제하고 있으나 일본과 한국은 취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임.
- □ 한국의 노인부문예산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과 건강보험내의 의료비지 출 등을 포함하여 의료비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미국의 노인 부문과 차이점은 노인일자리 관련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며, 독거노인에 대한 급식 및 교통편의 제공 등에 대해서는 정책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 OECD국가의 재정건전성과 사회지출의 GDP비중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사회지출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부채의 GDP대비 비중이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사회지출의 수준을 5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이들 그룹의 2007년,
 2010년, 2015년 국가부채의 GDP비중(평균)을 계산해 본 결과 국가 부채평균이 가장 높은 그룹은 사회지출이 20%~25%인 국가군임.
 - 사회지출비중이 25%~29%인 그룹과 30%이상인 그룹은 국가부 채의 GDP비중(평균)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계산되었음.
 - 2015년의 국가부채수준과 2007년과의 격차에 있어서도 사회지출 수준이 20%~25%에 속하는 국가의 변화율이 가장 높았음.

(표 13) 사회지출과 국가부채

(단위: %)

사회지 출수준 GDP비중	2007년 평 균국 가부채 GDP비중	2010년 평 균국 기부채 GDP비중	2015년 평 균국 기부채 GDP비중
15%미만 국가	23.0	27.3	26.1
15%~20%미만 국가	32.8	60.1	58.6
20%~25%미만 국가	74.4 (58.1)	93.9 (75.1)	100.9 (79.6)
25%~29%미만 국가	54.4	70.3	77.2
30%이상 국가	62.2	75.4	74.9

주: ()는 일본을 제외한 경우의 비중임.

(표 14) 사회지출과 국가부채와의 상관계수

	정부부채2007과	정부부채2010과	정부부채 2015와
	사회지출 2007	사회지출 2007	사회지출 2007
상관계수	0.356826**	0.337308**	0.365807**

주: 0.01수준에서 유의함

- 이들 국가군에 일본이 포함되어 있어서 평균을 크게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일본을 제외하고 분석하는 경우에도, 사회지출의 GDP 대비 비중과 국가부채의 관계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확실하며 선형적인 관계보다는 Concave한 형태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사회지출의 GDP비중이 일단 20%를 넘으면 국가부채수준이 70% 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OECD는 국가부채수준이 76% 이상이면 높은 국가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사회지출수준만으로 추정한다면 국가재정의 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지출의 GDP 대비 비중을 20%선으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 박형수·전병묵(2009)¹) 은 사회지출을 OECD SOCX기준으로 장기간 추계한 결과 2030년에는 GDP대비 14.43%, 2050년에 20.84%가 될 으로 전망하였음.
 - 2007년 OECD 평균이 22.3%이므로 우리나라는 2050년경에 현재 의 OECD 평균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사회지출의 비중은 국민연금제도에 의한 노령·유족급여 와 건강보험급여인 보건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조세제도로 운영되는 유럽 또는 미국과는 달리 이 부분으로 인한 재정적자의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인상이 급여인상분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인상 또는 급여삭감이 추가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 급여부족분은 일반회계예산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임.
 - 우리나라 사회지출비의 장기전망을 분석해 보면 사회보험으로 인한 지출이 급증하고 현금급여나 사회서비스에 대한 급여증가는 크지 않 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가족에 대한 사회서비스급여수준이 높은 국 가일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음.
 - 출산율의 증가는 국민연금재정건전성에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합계출산율의 가정에 따라 국민연금의 잠재적부채수준이 크게 차이가 남.
 - 기족에 대한 사회서비스급여증가는 합계출산율을 증가시켜 사회 보험의 재정건정성을 크게 제고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음.
 - 또한 노인에 대한 사회서비스급여는 노인의 건강을 유지시켜 외 래나 입원치료를 예방하여 건강보험재정에 기여하게 될 것임.

¹⁾ 박형수·전병묵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벌에 관한 연구』, 2009

- 사회서비스지출의 OECD평균(11%)을 적용한 후, 우리나라의 2009년 도 GDP(1,063,059십억 원)에 사회지출비중을 적용하면 2010년에 4조 8천억 정도의 추가적인 사회서비스지출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됨.
 - OECD사회서비스지출비중의 평균(11%)를 적용한 경우의 총사회 지출의 GDP비중은 2050년에 22.76%로 사회지출의 증가를 반영 하지 않았을 때의 20.84%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표 15〉 사회서비스지출 증가 시 우리나라 사회지출의 장기전망

	기족에 대한 사회지출의 GDP비중(A)	OECD평균적용시 기족에 대한 사회지출의 GDP비중(B)	총사회지출의 GDP비중(C)	OECD평균적용시 총사회지출의 GDP비중 (B-A+C)
2010	0.48	0.94	8.62	9.08
2015	0.51	1.08	9.87	10.44
2020	0.60	1.22	11.18	11.8
2025	0.55	1.39	12.70	13.54
2030	0.51	1.55	14.43	15.47
2035	0.46	1.75	15.92	17.21
2040	0.41	1.94	17.67	19.2
2045	0.38	2.12	19.30	21.04
2050	0.37	2.29	20.84	22.76

11. 한국교육개발원

- 시회적 지본 수준 정책 분석 및 교육투자 효율화 방안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인적 자본 및 문화적 자본과 함께 새로운 유형의 자본으로써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경제성장뿐 아니라 사회적 통합을 통하여 안정적 사회 발전의 동력 으로서도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음.
- 사회적 자본의 다양한 수준에서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 인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조직, 국가 수준에서 사회 적 자본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의 효과를 개인, 조직, 국가 수준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사회적 자본 항상 지 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
- 더불어 성인과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 형성요소와 효과의 유형이나 원인-결과의 메커니즘 차이를 반영하여 대상에 따른 차별회된 학술 적 검토와 정책마련도 필요함.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적 자본의 효과를 개인, 조직, 국가수준에서 분석하여 사회적 자본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함.
- 또한 한국 사회적 지본 효과를 개인, 조직, 국가 수준에서 판단할 수 있는 효과준거를 설정하고, 선행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사회적 지본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 한국의 경제발전 및 사회통합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 인, 조직, 국가 수준에서 사회적 자본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 지 원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장단기 사회적 자본 관련 사회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둠.

□ 연구내용

- 문헌연구 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자본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효과준거를 마련함.
- 사회적 자본의 효과준거를 기준으로 개인수준의 사회적 자본 효과를 부석함:
- 사회적 자본 향상을 우선 지원방안을 수행할 주체별로 나누어 국가 수준, 지역수준, 교육기관 수준으로 제시함.

□ 연구방법

- 사회적 자본의 효과준거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적 자본의 개인, 조 직, 국가 수준에서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요인을 제시한 연구를 수집 및 분석함.
- 사회적 자본의 개인, 조직, 국가 수준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준 별로 사회적 자본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청소년 과 성인의 수준에서 각각 분석함.
- 더불어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체계적 방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회적 자본 정책 관련 연구를 수집 및 분석함.
- 사회적 자본의 효과준거 설정, 개인, 조직, 국가 수준의 효과 분석, 체계적 방안 개발 등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를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함.

2. 시회적 지본의 형성요소 및 효과

- □ 사회적 자본의 내용 및 영역
 - 기존의 관점에서는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의 2가지 유형의 자본에 의하여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설명하려는 입장이 강하였으나 최근 인적 자본의 활용, 지식의 축적과 생산, 사회적 네트워크 등에 기초 한 사회적 자본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공헌이 큰 Putnam, Bourdieu, Coleman 등의 관점을 기초하여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요소에 대하여 설명함.
 - 사회적 자본의 영역은 사회적 자본의 구성하는 요소라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효과를 측정・분석하는 선행연구의 통 합적 분석을 위하여 사회적 자본의 요소를 사회참여 및 시민의식, 신뢰, 호혜성 및 관용, 네트워크 및 사회적 지원으로 구체화함.
- □ 청소년과 성인의 사회적 자본의 영향요인
 - 본 연구에서는 사회참여 및 시민의식, 신뢰, 호혜성 및 관용, 네트워크 및 사회적 지원의 영역에서 청소년과 성인의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제시함.
- □ 사회적 자본의 효과
 - 사회적 자본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발생시킬 수 있는 효과를 학업성취, 학교적응, 복지, 건강, 범죄, 건강, 직무성과 및 기업성과, 지역사회 발전 및 국가 발전, 지식공유, 경력성공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함.

- □ 사회적 자본의 효과
 - 인적 자본 및 문화적 자본과 함께 새로운 유형의 자본으로써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3. 시회적 자본의 효과 분석

- □ 삶의 질과 사회적 자본의 영향관계 분석
 - 청소년과 성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자본의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함.
 - 삶의 질을 구성하는 하위 변수로 삶의 만족도·행복감·건강을 투입하였으며, 사회적 자본 변수로는 세 가지 하위영역인 사회참여 및 시민참여·신뢰, 호혜성 및 관용·네트워크 및 사회적 지원의 각 수준 변수를 투입함.

□ 청소년의 삶의 질과 사회적 자본의 영향관계

- 다중화귀 분석 결과, 사회적 자본의 변수 중 사람들과의 만남, 사람들에 대한 신뢰, 공공기관 신뢰, 이민자 허용도, 이민자의 영향에 대한 인식, 부모와의 활동, 친척들과의 만남, 비밀을 상의할 사람의 존재 여부, 학교 소속감 등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사람들과의 만남 사람들에 대한 신뢰, 공공기관 신뢰, 이민자의 영향에 대한 인식, 부모와의 활동, 친척들과의 만남, 비밀을 상의할 사람의 존재 여부, 학교 소속감, 의사소통 등이 삶의 행복감에 긍정 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마지막으로 사람들과의 만남, 사람들에 대한 신뢰, 공공기관 신뢰, 부모와의 활동, 친척들과의 만남, 비밀을 상의할 사람의 존재 여부, 학교 소속감, 의사소통 등이 청소년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남.

- □ 성인의 삶의 질과 사회적 자본의 영향관계
 - 다중회귀 분석 결과, 사회적 자본의 변수 중 가족모임 및 활동참여, 가족친구 신뢰, 사람 신뢰, 친척 및 친구와의 접촉, 개인적 문제를 상담할 사람 여부, 가족 활동 등 미시적 수준의 변수들이 삶의 만족 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내 정치활동 방식, 지역사회 소속감, 의사소통, 지역사회 문제 인식, 지역사회 미 래비전 등이 중시적 수준에서, 국가수준 문제개선 활동 참여, 낯선 한국인 신뢰 등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맥락에서 성인의 삶의 행복감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적 자본에 대한 분석 또한 실시함.

4. 시회적 지본 형성을 위한 지원방안

- □ 국가 수준의 지원방안
 -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정부의 교육투자 현실화,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시민 참여 문화 활성화, 시민역량 교육내용 및 개발이 필요함.
- □ 지역 수준의 지원방안
 - 지역의 사회적 자본 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교육투자 재 정을 확보와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등이 필 요함.
- □ 교육기관 수준의 지원방안
 - 학교, 가정, 평생교육기관의 역할 실행 및 연계가 필요함.

III. 한국노동연구원

- 고용지속형 시회적기업: 모형과 발전방향

1. 서론

- □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성 지원 정책에 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수준 향상의 계기를 마련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임.
 - 우리나라에는 2007년 7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2009년 말 기준으로 노동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수가 약 260 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은 국내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90% 이상이 소규모 영 세기업에 지나지 않아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서 큰 효과를 내지 못 하고 고용의 지속성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 본 연구는 선진국의 Best Practice를 벤치마킹하여 '고용친화적' '고용지속형' 사회적 기업의 발전방향과 정책지원방안을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한국의 시회적기업: 제도와 현실

- □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1월 「사회적기업 육성법」 을 별도로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활발히 도입, 시행하고 있음.
 - 중앙정부 혹은 지자체 및 위탁기관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이 조세혜택, 시설비 및 인건비 지원, 경영컨설팅 지원, 교육훈련 지원, 창업 지원, 판로 지원 등을 하도록 법상에 규정하였음.

- 또한 세법 상에서 사회적기업은 인증 후 4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50% 감면받으며, 민간 영리기업이 비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에 지출하는 비용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소득 5% 내에서 전액이 손금 처리됨.
- 사회적기업을 위한 재정지원은 크게 인건비 지원과 시설비 등의 융 자 지원으로 구분됨.
 - 이 중 인건비 지원은 사회적일자리 사업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서 비롯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이외에 사회적기업의 경영전문성 확보를 위한 경영전문인력 지원과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의 사업자부담금 지원이 인건비 지원에 해당함.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하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서 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에게 해당 사업에 소속된 근로자의 급여 및 사 회보험료를 포함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고 있음.
-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이하 전문인력 지원)은 사회적기업육 성법 제14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 서 전문인력을 사회적기업 초기의 경영시스템 구축에 활용하여 기업 내부의 경영전문가로서 사회적기업에 제공되는 경영컨설팅에 따라 컨설팅 효과를 제고,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됨.
 - 또한 청년층의 사회적기업가 육성과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09년 에는 청년 전문인력을 사회적기업에 채용토록 한시 지원을 실시함.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고용지원센터

로의 신청을 통하여 지원됨.

- 다만 사회적기업의 대표 및 임원은 제외되며, 유급근로자라 하더라도 대표의 직계 존비속은 지원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인증 사회적기업 대부사업은 육성법 제11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원 활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시설비 및 임대차보 증금, 운영자금 등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지원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회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8년 말 사회적일자리사업 경영컨설팅 사업으로 시작됨.
 - 이는 사회적기업의 경영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기 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만이 아닌 수익창출을 통한 자립을 강화하 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내부의 경영전문가 육성과 함께 실제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여 수익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
- 소셜벤처 지원사업은 사회문제를 사회적기업의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의 혁신성과 창의성에 중점을 두고 소셜벤처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입상작에게 상 금지급 및 창업지원 등을 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가 아카테미(이하 아카테미 지원)은 사회적기업을 둘러싼 전문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창업을 지원하며 사회적기업의 경영성과 를 극대화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는 것 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각 교육기관을 통해 제공되고 있음.
- □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목적은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실 현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
 - 이를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제도 중 판로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생산제 품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기관에서 구매하여 사회적기업이 자립을 위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우선구매 대상으로는 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이 해당되며,

-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인증 사회적기업 또한 공공 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됨.
-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발굴을 위한 지자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은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우수 기초지방자치단체에게 지방 자치단체의 경상보조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음.
- 재정은 국비 80%와 지방비 20%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예산은 2010년 기준, 총 194억 원 이내로 국비 155억 원과 지 방비 39억 원으로 구성됨.
- □ 곽선화(2009)에 따르면 2008년 12월 기준, 사회적 기업 종사자 중 취약계층은 전체의 58.0%,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제품 수혜자중 취약계층 수혜자는 72.7%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 2007년의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55.3%, 취약계층 수혜율은 65.7%로 전년도 대비 소폭의 증가세를 나타남.
 - 분기별로 고용창출 성과를 살펴보면, 2009년 3월 유급근로자 수는 총 10,433명으로 전년도 동분기 7,002명에 대비하여 약 3,400명 이 상 늘어나 48.6% 증가.
 - 이 중 취약계층 근로자는 5,535명으로 전년도 동분기 3,754명 대비 약 1700명이 증가하여 47.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3. 주요 유럽국기에서의 시회적기업: 모형과 평가

- □ 유럽에서 오늘날 사용되는 의미의 사회적경제 개념은 1970년대 초반 프 랑스에서부터 협동조합(cooperative), 상호공제조합(mutual society), 민 간단체(association) 등 시민사회의 조직 일반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 용되기 시작하였다(Demoustier and Rousseliere, 2004).
 - 사회적기업 개념은 1980년대 이후 제기된 사회구조적 문제들에 대 해 혁신적인 방법으로 대답하며 등장한 새로운 사회적경제와 사회적

경제 일반의 재활성화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조직방식과 활동 방식, 그리고 이를 둘러싼 공공정책 일반을 종합적으로 가리키는 개 념이라 할 수 있음.

- 최근에는 경영학적이면서 실용적인 접근을 중심으로 발달한 영미식 사회적기업 개념이 유럽 대륙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기업, 사회적기 업가, 사회적기업가정신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 이고 있음.
- □ 2000년대 이후 유럽에서 사회적기업 개념은 사회적기업을 광의의 사회 적경제와 동일시하는 경향과 특정한 목적과 성격을 가진 협의의 개념으 로 제한하려는 경향으로 양극화되는 경향이 관찰된다.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서 주요하게 언급되는 사회적기업 의 혁신적 성격은 공익적인 목적 그 자체나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것 이 아니라 사회적기업들이 사회적, 경제적, 사회정치적인 다양한 목 표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조직 내부에서 또는 외부에서 결합하는 구조를 창출하는 역동성에 대한 것(Bacchiega and Borzaga, 2001; Defourny, 2001; Laville and Nyssens, 2001; Evers and Laville, 2004; Defourny and Nyssens, 2006).
 - 지역개발형 사회적기업 유형에서 실펴보았듯이, 최근에는 사회적기업 자체를 하나의 개별 조직이 아닌,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하는 공동의 프로젝트로 간주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
- □ 유럽 각국에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주요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하는 조직들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들 다양한 금융조직들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협동조합은행, 대형 협동조합이나 상호공제조합, 또는 종교기관에서

설립한 재단 등 전통적 사회적경제 부문에서 오랫동안 발전해왔고, 상당한 규모를 갖추고 있는 금융조직들이 사회적기업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경제 조직들에게 우호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마이크로크레딧 및 연대적 성격의 리스크캐피털과 같은 새로운 사회 적경제에 기반을 둔 연대금융조직들이 있음.

4. 국가사례: 오스트리아의 사회적기업

5. 결론: 고용지속형 시회적기업의 발전방안

- □ 한국에서의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비영리민간단체들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참여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해도 과 언이 아님.
 - 그러나 높은 재정의존도 및 재정의 불안정, 미흡한 경영능력, 비전문 적이고 빈약한 인적자원 풀 등의 문제는 한국의 사회적기업이 출발 부터 안고 있는 취약점임.
 - 특히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된 주요 계기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받기 위한 것이었음은 기 알려진 사실임.
 - 여기에 복지와 고용이 연계된 대안적 정책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이 인 정을 받게 되면서 정부의 각 부처에서 재정지원 이외에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사실임.
 - 이처럼 탄생과 성장 이력에 있어서 민간 부문의 자발적 참여와 이니 셔티브에 의해 역사적으로 발전한 서구의 사회적기업과 달리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관주도적 재정사업에 의해 인증과 의존적 성장이 이루 어졌다는 점이 특징이면서 한계라고 할 수 있음.
 - 한국의 사회적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점으로 본래적 사회적기업 이 갖추어야 할 요건 중 '위험감수'(risk-taking) 및 자생적 경쟁력 배 양이 미흡하다는 점과 관주도적 여건 조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적

-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사회적 생태계 사회적기업가 + 비영리단체 + 자원봉사간의 네트워크 - 의 조성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의 고용창출 이라는 이중의 목적이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부문에서는 사회 적기업의 개발 및 육성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
- □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사회 적 투자가 무엇보다 필요한테 그 중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해야 하는 항 목은 인적자원임.
 -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사업의 관리·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 기업 가적 마인드를 가진 전문인력의 양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런던의 이스트 엔드에는 최근 청년들을 대상으로 비영리 기업 경영을 위한 훈련을 담당하는 사회적기업가 학교가 설립되었음(Bradshaw, 1997).
 -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은 사회적기업과 기존 기업들 간의 대화를 활발히 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이니셔티브" 과정을 개설했고, 하버 드의 케네디 행정 대학원은 현직 행정가들과 행정가 지망생들을 위 한 경영 과정을 제공하고 있음.
 - 이러한 훈련과정에서는 사회적기업가가 갖추어야할 두 가지 측면 -즉 기업의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 의 관리능력과 전문성이 강 조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도 사회적기업 컨설팅 실무자 훈련 및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하여 유수 대학의 MBA 과정에 사회적기업 관련과목을 개설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기업을 전공으로 하는 석사과정 및 MBA 과정 등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 지역의 사회적 필요를 잘 이는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와 헌신도 사회적기 업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음.
 - 특히 퇴직자, 재직자나 자원봉사자들은 모두 지역 네트워크의 참여나

직장 생활에서 얻은 각자의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으로 사회적기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기금 부족은 사회적기업들이 사회, 경제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극복해야할 또 다른 중요한 장애물임.
 - 영리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듯이 사회적기업도 필요 한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을 위한 자본투자조직은 실업극복재단, 사회연대은행 그리고 신나는 조합에 불과하고 재원규모도 제한적임.
 - 사회적기업의 재원조달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자선시 장(Market for Charity)의 형성이 제안됨(김혜원, 2009).
 - 그러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자선시장이 실효성 있는 자금재원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초기의 성공이 전제되어야 함.
- □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영상 의 투명성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 는 것도 중요함.
 - 사회적기업 스스로가 민간 기업과 같은 경영 역량을 갖춤과 동시에 정부의 사회적기업의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 필요함.
- □ 정부가 해야 할 향후의 과제는 인건비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적기 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판로를 확대하거나 사회적기업을 위한 자본시장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장원봉, 2006).
 - 현실적으로 수익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이 독자적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련기관들이 보조금 외에도 주요 구매자로 나서거나 판매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력을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이 신속하게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김명희, 2008).

VI.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 중신층의 추이, 이탈원인과 대책

1. 서론

- □ 1990년대 초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중산층 감소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중신층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추세력으로 사회적 안정과 균형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중산층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질 경우,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에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됨.
 - 또한 중산층의 붕괴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불안과 갈등을 심화 시킬 수 있음.
 - 중산층의 상대적 빈곤층으로의 이탈을 방지하고 중산층의 복원 및 미래중산층을 양성하는 것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 우리는 중산층과 관련한 연구를 두가지 방향에서 수행하였음.
 - 먼저 제2장에서 우리나라의 중신층 변화 추이를 이행행렬을 통하여 알아보고, 중산층의 이탈을 결정짓는 요인을 분석하였음.
 -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중산층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중산층의 이탈 원인을 분명히 파악한 뒤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만 실효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임.
 - 제3장에서는 중산층 이탈 문제에 대한 복지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한국의 중산층이 가지고 있는 복지의식에 대한 분석을 통 해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여기서 말하는 복지의식이란 복지정책에 대한 수요를 비롯하여현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나 복지 예산 확충을 위한 세금 부담 의

- 사 등 사회구성원이 지니고 있는 전반적인 복지에 대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 한 나라의 복지정책은 그 나라의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preference)와 믿음체계(belief) 가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표출되어 형성되어 나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는데 경제학적으로 아무리 최적의 정책이라도 국민들의 선호와 믿음에 동떨어진 복지정책은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유지 존속되기도 어렵기 때문임.

2. 한국의 중신층 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 □ 중산층의 정의는 상대적 기준의 중산층 정의와 절대적 기준의 정의로 구분됨.
 - 상대적인 기준의 중산층 정의에는 중위소득에 대한 일정비율접근법 (fixed percentage of median income approach)과 구간환기방법 (interval deflator approach)이 있으며 OECD에서는 일정비율접근법을 채택하여 중산층 비율을 중위소득의 50~150%로 정의함.
 - 중산층 비중에 대한 연구는 Thurow(1984)와 Lawrence(1984)가 미국의 중산층 추이를 분석한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Bradbury(1986) 및 Duncan et al.(1991), Horrigan and Haugen(1988) 등도 미국에서 중산층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Easterly(2001)는 높은 중산층 소득점유율을 가진 나라들에서 더 높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였으며, 이는 더 높은 수준의 인적 자원과 기반시설 축적, 경제 정책과 정치적 안정화, 도시화에 근거한 것으로 설명함.
 - 우리나라에서는 소득 양극화에 관한 연구와 함께 중산층 관련 연구 가 많이 행해졌으며, 신관호·신동균(2006) 및 삼성경제연구소(2006) 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이 감소하고 하위 소득 계층이 증가하

였음을 발견함.

- 남준우(2007)와 이정우이성림(2001)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중산 층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고 중산층으로부터 이탈한 계층은 상위와 하위로 양극화됨을 보임.
-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추이와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1~11차 한국노동패널(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자료를 이용하여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의 중산층 추이를 분석함.
 - 본 연구는 조정된 OECD 균등화지수를 사용하여 가구균등화를 실시 하였으며, 소득과 소비는 한국노동패널의 소득 및 소비 구분에 따라 총소득 및 총소비를 설정하였음.
 - 연간 가구당 중위소득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냄.
 - 중산층을 기구 중위소득의 50~150%로 정의하고, 가구당 소득의 중 위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표본을 하위층, 중산층, 상위층으로 구분하 여 그 비중을 구함.
 -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1997년 49%에서 1999년 까지 증가추세에 있다가 2000년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었으며 2005년 이후 다시 증가추세를 보임.
 - 이는 가계동향조사의 자료를 이용한 결과와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원인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강성진, 2010).
- □ 외환위기 이후 개별 가구의 소득이동 추이를 이행행렬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를 보면 중산층에 머무는 확률이 미국의 1년간 머무는 확률인 86% 로 2005-2007년 기간 한국의 경우 63%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한국사회가 동학적임을 알 수 있음.
 - 1997년에서 2007년까지 소득계층이 변동하지 않았던 가구의 비중은

전체가구 3,644가구 중 1,946가구로써 53.4%에 해당됨. 전체 표본 가구 중 22.2%는 소득계층이 하락하였으며, 24.4%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빈곤층과 고소득층으로의 이동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남.

- □ 가구 특성 및 가구주 특성에 따른 중산층 이탈의 결정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항선택모형(Binary Choice Model)을 이용하여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실시함.
 - 이항선택모형을 중산층에서 상대적 빈곤층으로의 이동 및 중산층에 서 상위층으로 이동한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Logit Model을 이용 하여 분석함.
 - 기구주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 중 가구주의 연령, 기혼자, 남성 등은 소득이동 단계에서 대체로 소득상승에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 기구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 중 자가주택 보유자, 도시거주자는 소 득상승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원수, 17 세이하 가구원수, 60세이상 가구원수는 대체로 소득상승과 음의 상관관계를 것으로 나타남.
 - 각 독립변수들의 한계효과를 살펴본 결과, 중산층의 이탈에 영향을 끼치는 방향은 Logit Model 분석에서와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가구 특성과 가구주 특성을 반영하는 독립변수들을 추가하였을 때도 모형이 강건성을 가짐을 확인하였음.
- □ 주요국의 중산층 현황을 실펴보면, 1980년대 중반 이후 거의 모든 선진 국에서 중산층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각국은 중산층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우리나라의 중산층 강화정책은 중산층의 이탈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산층을 이탈하여 상대적 빈곤층으로 이동한 가구들의 특성 을 파악하고, 이들 가구에 중산층 정책 재원을 집중할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소득에 의한 계층이 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미래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따라서 우리보다 먼저 이러한 경험을 한 선진국들의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가 사용할 수 있는 주요정책들을 선택할 수 있음.

3. 한국 중산층의 복지의식 분석

- □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분석은 중산층 이탈 문제에 대한 복지 정책 적 대안을 제공함.
 - 사회구성원의 복지의식은 향후 복지정책의 실현가능성과 유지 존속 하기 위한 기반이 됨.
 - Corneo and Gruner(2002)는 사회구성원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개인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호모에코노미쿠스 효과, 개인의 공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공공가치 효과 등을 분석하였음
 - 우리의 결과에 의하면 한국인은 호모에코노미쿠스 효과보다는 기회의 평등인식을 바탕으로 한 공공가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 본 연구는 한국인의 복지의식 추이와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국기별 복지의식을 비교하기 위해 2차 한국복지패널(이하 KOWEPS) 자료,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이하 ISSP) 2006년과 2009년 자료를 활용하였음.
 - KOWEPS 자료는 연령별 인구 분포가 통계청 2006년 추계인구 자료와 상이하여 통계청 추계인구 자료로 연령별 인구기중치를 환산하여 반영하고 분석결과마다 원 자료와 비교분석 하였음.
 - ISSP 자료는 2006년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한 조사 자료와 2009년 사회 불평등을 주제로 한 조사자료를 국가 간 비교분석과 한국인의 평등인식 분석에 활용하였음.

- □ 소득분배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우리 국민들은 대다구가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불평등한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라고 있으나 계층에 따라 유의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우리나라가 소득이나 재산에 있어서 평등한지에 관한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75%가 불평등하다고 응답하였고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것 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전체 응답자의 75%가 응답하였음.
 - 그러나 교육수준별, 소득계층별, 연령별로 응답 비율을 비교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실제로 순서형 프로빗 회귀분석으로 개인의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토하였으나 교육연수, 나이 성별, 가구원 수 등 거의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ISSP 2006년 자료로 동일한 질문에 대해 국가별로 순서형 프로빗 회귀분석을 하여 비교하였을 때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만이 소득이 나 교육연수 등에 있어 유의하지 않았음.
 -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라면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할 것이므로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복지의식을 형성할 수 있음.
 - 결국 중산층의 복지의식은 부유층이나 서민층과 차별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복지의식을 공유함을 의미
- □ 복지 재원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세금을 증가시키더라도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소득계층과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음.
 -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질문에 전체 응답 자 중 44%가 동의하였으며 순서형 프로빗을 활용한 분석 결과 소득 이 높을수록 반대하며 여성인 경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 증가에 따른 기대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고, 여성인 경우 가계 살림에 대한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 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42%가 동의하였으며 순서형 프로빗을 활용한 분석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 국민들은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생 각과 동시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금을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 이를 토대로 우리 국민들이 이중적인 태도를 지난다고 볼 수 없음.
- □ ISSP 2006년 자료를 통해 국가 간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견 그리고 건 강분야 및 교육분야 정부지출에 대한 의견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인 의 복지의식은 국제적으로 중간 혹은 중간 이하의 수준이었음.
 - 소득격차 해소가 정부의 역할인지를 묻는 질문에서 우리나라는 80.6%가 동의하여 전체 33개 국 중 14번째로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음.
 - 건강분야에 대한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33 개국 중 21위였고 교육분야에 대한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 한 비율은 33개국 중 23위였음.
- □ 한국인의 복지의식은 계층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아 기회평등주의 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석현호 외(2005)는 제4차 불평등과 공정성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기 회평등인식을 살펴보았음.
 - 그들의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 중 85% 이상이 가난하여 대학에 진학할 수 없는 학생에게 정부가 학비를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우리국민들이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함.

- ISSP 2009년 사회 불평등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우리 국민들의 평등 인식을 살펴본 결과 한국 사회가 한국 사회가 기회에 있어 불평등한 측면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중 40% 이상이 성공에 있어 집안 배경이나 부모의 교육 수준과 같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요인이 매우 중요한 영 항을 미친다고 응답하였음.
 -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더 많은 보건의료를 누리고 자녀 교육 지원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50% 내외 응답자들이 부정당하다고 응답하여 우리 국민들은 보 건이나 교육 분야에서 기회가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인식 하는 것으로 나타남.

4.. 결론 및 정책제언

- □ 본 연구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검토하였음
 - 제2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하여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가 구당 중위소득과 중산층 추이를 살펴보고 소득이동의 추이를 이행행 렬을 통하여 분석하였음.
 - 우리나라의 연간 가구소득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중산층의 비중은 1999년 이후 감소추세를 나타내었으나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는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2005년 이후 중산층의 증가는 가계동향조사의 자료를 이용한 결과와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그 원인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임.
 - 외환위기 이후 개별 가구의 소득이동 추이를 이행행렬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에서 소득계층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동학적 인 경향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산층의 이탈을 결정짓는 가구 특성 및 가 구주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항선택모형을 이용하여 계량경 제학적 분석을 실시하였음.
- 그 결과, 가구주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 중 가구주의 연령, 기혼자, 남성 등은 소득이동 단계에서 대체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 중에는 자기주택 보유자, 도 시거주자가 소득상승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제3장에서 한국의 중산층이 갖는 복지의식에 대한 비교분석을 한국 복지패널과 ISSP자료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음. 제 3장에서 우리가 얻 을 수 있는 잠정적인 결론들은 다음과 같음.
 - 우리국민들의 대다수는 소득이나 재산의 분배가 매우 불평등하며
 이 불평등한 수준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를 바라고 있음.
 - 소득분배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교육수준별, 소득계층별, 그리고 나이별로 크게 다르지는 않았음.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중산층의 복지의식이 서민이나 부유층의 복지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함축함.
 - 한국인은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음.
 - 분야별 복지지출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면 과반수의 응답지들이 모든 복지분이에 걸쳐 정부의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 며, 그 중에서도 특히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노인, 장애인, 빈곤 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 이상의 분석결과는 특정계층에 집중한 정책보다는 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더 적절함을 함축함.

삼고문천

- 강성진(2010). 한국 중산층 현황과 결정요인. mimeo.
- 강성진 이우진(2009). 성장, 빈곤, 불평등과 사회지출의 상호관계 분석.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27-05.
- 건강보험공단(2008). 건강보험통계연보
- 구태희 이윤철(2005). 호텔산업의 전략적 네트워크: 네트워크 밀도, 구조적 공백 그리고 성과: 국내 특급 호텔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28(4), pp.67-86.
- 국민연금공단(2010). 국민연금 통계연보 2009.
- 권순미(2000).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재원(2005). 교육연극(DIE)이 청소년의 문화관용성에 미치는 효과 연구. 사회과교육, 44(4), pp.129-148.
- 김경근(2000).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아동의 학업성취. 교육사회학연구, 10(1), pp.21-40.
- 김경식 안우환(2003). 학업성취 결정요인으로서 가족의 사회적 자본 탐색. 교육학논총, 24(1), pp.81-99.
- 김경식·최성보·이현철(2009), 사회적 자본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교원교육, 25(2), pp.60-83.
- 김남선 안현숙(2006). 평생학습도시 관련변인의 사회자본 영향에 관한 연구. 안동시와 영천시의 사례.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7(2), pp.113-124.

- 김상민(2005). 주민환경운동과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서울 시 마포구 "성미산배수지건설반대운동"을 사례로 시민사회와 NGO, 3(2), pp.155-237.
- 김성경(2007). 우리나라 자원봉사자의 적극적 자원봉사참여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자원봉사정체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1, pp.167-186.
- 김솔(2005). 정치참여교육 활성화에 관한 연구: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주·유태용(2009). 개인 특성이 조직내 사회적 네트워크 크기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네트워크 크기와 강도의 효과. 한국 심리학회자: 산업 및 조직, 22(2), pp.27-51.
- 김예숙(2002). 학생상담자원봉사자의 봉사의식과 자이존중감이 봉사활동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우식(2006). 연결망, 불평등, 위법행동. 한국사회학, 40(5), pp.29-60.
- 김창언(2005). 청소년의 정치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농 존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태기(2010). 중산층문제와 사회복지. 한국경제연구원.
- 김태종 외(2006).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기본조사 및 정책연구. KDI 국 제정책대학원.
- 김태준 외(2009). 한국의 사회적 자본 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RR 2009-18.
- 김태준(2009).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 사회적 상호 작용 영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3, 연구보고 09-R19-2.
- 김홍종(2006). 양극화 현상에 대한 각국의 인식과 정책적 대응. 한국응용경 제학회. 응용경제. 8(2).
- 김홍종·김균태·오형범·나수엽·하유정(2005). 전 세계적 양극화 추세와 해외 주요국의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나영선 외(2005).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원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남준우(2007).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규모 및 소득 변화의 추이. 한국노 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7(4).
- 류혜영(2007). 민주적인 경험이 시민성의 태도 및 실천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재우 강유진 하회주(2004). 초등학생 자원봉사 실태 및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청소년연구, 15(2), pp.215-245.
- 민승규 이갑수 김근영 손민중(2006a). 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CEO Information 574. 삼성경제연구소
- 민승규·김용기·이갑수·김근영·손민중·양준호 외(2006b). 소득양극화의 현상 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 박건정(2003). 사회과 교육의 세계시민의식 형성에 관한 영향: 수도권 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업(2004). 고등학생들의 학교급별 임원경험과 민주시민의식의 관계. 명 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형수 전병묵(2009).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벌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조세연구원.
- 박진영(2006). 지역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사회적 자본 관점에서의 분석 및 과제: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2(1). 한국평생교육학회.
- 박희봉 외(2003). 한국인의 신뢰 수준 및 영향 요인. 한국정책학회보, 12(2), pp.199-227.
- 배귀희 김영환(2006). 사회자본과 조직몰입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Burt의 구조적공백(Structural Holes) 이론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4(3), pp.1-32.
- 백윤정 김은실(2008). 실행공동체내 지식공유의 영향요인: 구조적 특성과 관계적 특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식경영연구, 9(2), pp.63-86.
- 변미희(2002). 복지의식에 관한 연구동향, 한국가족복지학, 7(2), pp.75~89.

- 보건복지부. 2007년도 예산안
- 보건복지부(2009).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 및 예산개요.
- 보건복지부(2010).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개요
- 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노동부미래기획위원회(2009). 서민·중산층 지키기를 위한 「휴먼뉴딜」 추진전략.
-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 http://www.socialservice.or.kr/
- 서문희 외(2006).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 방안.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 서문희 외(2009).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의 효과에 관한 연구. 육아정책연구 소.
- 석상훈(2008). 외환위기 이후 소득이동에 대한 연구. 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 제9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석현호 외(2005).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의식의 변화.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송경재(2006). 사이버커뮤니케이션과 사회자본 ; 자발적인 시민참여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에 관한 사례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9, pp.221-255.
- 송인옥(2003). 탐구공동체학습이 초등학생의 민주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관호 신동균(2007). 소득분포양극화의 특성과 경제사회적 영향. 노동경제 연구원.
- 양관수(2003). 초등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에 관한 연구: 제주도내 초등학생 5·6학년생을 중심으로 제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승실 외(2007). 국가 인적자원정책 추진의 비전과 전략. 한국교육개발원.
- 양준호(2006). 일본의 소득양극화 현황과 시사점, SERI 경제 포커스, 삼성 경제연구소
-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각 연도.
-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2008). 보육통계.

- 여유진 외(2007).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우천식 외(2007). 한국경제사회와 사회적 지본. 한국개발연구원.
- 유경준(2007). 소득 불평등도와 양극화. 한국개발연구원.
- 윤석명 외(2008). 공적연금의 지속기능성에 관한 연구 :재정적정치적 지속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경희(2002). 초등학생 자원봉사 실태 및 체험식 사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규목·이준미(2004). 도시공원녹지관리의 자발적 공동체내 사회적 자본 형 성 요인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9(2), 271-284.
- 이병수(2000).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의정부 시민의식조시연구. 한국비영리 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129-139.
- 이성호(2007). 신빈곤층 사회적 네트워크의 해체와 대응전략. 전주시 노동 빈곤층을 중심으로 담론 201, 10(4), pp.239-273.
- 이영찬 외(2008). 지역인적지원개발을 위한 사회적 자본 측정 및 형성전략. 경남발전연구원.
- 이용순(2007).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 요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인재 외(2007). 사회투자재단 역할과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도시연구소
- 이장원 외(2008). 경제사회발전모델의 사회적 합의 구축방안 연구. 경제·인 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8-01-01. 한국노동연구원.
- 이재원(2008).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희망e든 프로젝트- (재)사회서비스 관리센터.
- 이정우 이성림(2001). 경제위기와 빈부격차 : 1997 년 위기 전후의 소득분 배와 빈곤,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7(2), pp.79-109.

- 이중섭(2009).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 복지정책, 36(4), pp. 73~99.
- 이진형(2004). 중학생의 민주시민의식에 관한 연구: 대전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정모(2004).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일본 개호백서(2008).
- 일본 후생성 홈페이지 http://www.mhlw.go.jp/english/index.html
- 일본 후생노동백서(2008).
- 일본 보육연감(2008).
- 일본 NPO법인 건강서비스 신업진흥기구(2007). 육아지원 관련 서비스 산업연구회 보고서.
- 장은주 박경규(2005). 성별에 따른 개인특성 및 사회적 자본과 주관적 경력성공과의 관계. 경영학연구, 34(1), pp.141-166.
- 정명호 오홍석(2008). 집단의 사회적 자본과 집단성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인사조직학회. '사회적자본과 기업경쟁력' 세미나 자료집.
- 조돈문 신광영 이성균(2003). 경제위기와 한국인의 복지의식-사회계급별 복지의식을 중심으로-, 집문당.
- 최경수(2008). 사회통합의 과제와 저소득층 소득향상, KDI정책포럼 제191호 2008-03. 한국개발연구원.
- 최균·류진석(2000). 복지의식의 경향과 특징: 이중성. 사회복지연구, 16호, pp.223~254.
- 최길한(2003).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정치적 지향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운실(2005).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성과 분석. **직업교육연구**, 24(3), 381-420.
- 최정은(2006). 청소년의 사회단체 참여 경험과 참여 동인의 형성 과정. 한 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창수 외(2000).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미국의 교훈. 지방행정연구 14(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허선호(2002). 이타행동증진 프로그램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동기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현영섭(2009). 생명보험사 실행공동체 구성원의 비공식적 네트워크, 지식공 유, 경력계획 간의 구조적 관계. **평생교육** HRD **연구**, 5(3), pp.75-98.
- 현영섭(2010). 다문화 학습동이리의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s). 2010 년 한국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 평생교육분과 자료집.
- 현영섭·조대연(2009). 학습동아리의 사회적 연결망과 지식공유의 관계: 관계 계밀도, 집중화, 지식공유간의 비선형 모형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15(3). pp.189-212.
- 홍영란 외(2006). 국가발전을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기본연구.
- 홍영란 외(2007). 사회적 지본의 정책의제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홍영란 외(2008). OECD 학습의 사회적 성과 국제 비교 연구. 한국교육개 발원 기본연구.
- 홍영란 외(2008).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투자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8-15-03.
- 홍영란 외(2009). 사회적 자본 수준정책분석 및 교육투자 효율화 방안.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27-03.
- 홍종학(2006). 양극화와 경제구조개혁.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8(2).

-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in USA(2011). *Justification* of Estimates for Appropriations Committees.
- Alberto Alesina, Eliana La Ferrara(2005).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in the land of opportuniti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9, pp.897-931.
- Alberto Alesina, George-Marios Angeletos(2005). "Fairness and Redistribu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5 No. 4.*
- Alberto Alesina and Nicola Fuchs-Schundeln(2007). "Good-Bye Lenin (or Not?): The Effect of Communism on People's Preferenc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7 No. 4.*
- Alessandrini, M. (2006) *Social capital in Australia: The 'Haves' and 'Have-nots'*. Australia and New Zealand third sector research: Eighth Biennial Conference.
- Balatti, J., Black, S., & Falk, I. (2007). "Technical for social capital outcomes: The case of adult literacy and numeracy courses". *Australian Journal of Adult Learning*, 47(2).
-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June, 2010). Quarterly Review
- Banerjee, Abhijit and Esther Duflo(2008). "What is Middle Class about the Middle Classes Around the World?,"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2(2)*, pp.3-28.
- BIS Quarterly Review. March 2010.
- Bradbury, K.(1986). "The Shrinking Middle Class," *New England Economic Review*, pp.41-55.
- Burkhauser, R., A. Crews, M. Daly and S. Jenkins(1996). "Income Mobility and the Middle Class",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 Caplan, N., Choy, M., & Whitmore, J. K. (1992). "Indochinese refugee families and academic achievement". *Scientific American*, 266(2), pp.36-42.
- Carcach, C. & Huntley, C. (2002). "Community Participation and Regional Crime", Trends and Issues in Crime and Crime and Criminal Justice, no. 222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Canberra.
- Cote, S. & Healy, T. (2001). *The Well-being of Nations.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Paris.
-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in USA(2011),

 Administration on Aging, "Justification of Estimates for Appropriations Committees".
- Donelan, K. J. (2005). The God's project: Drama as intercultural education: An ethnographic study of an intercultural performance project in a secondary school. Published as an doctoral dissertation. Griffith University.
- Duclos, Jean-Yves, Joan Esteban and Debraj Ray(2004). "Polarization: Concepts, Measurement, Estimation," *Econometrica, Econometric Society, vol. 72(6)*, pp.1737-1772.
- Duncan, Greg J., Timothy M. Smeeding and Willard Rodgers(1991).

 "Whither the Middle Class'? A Dynamic View", Economics

 Working Paper Archive 56, Levy Economics Institute.
- Easterly, William(2001). "The Middle Class Consensus and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Economic Growth, Springer, vol.* 6(4), pages 317-35, December.
- Egert.B., (2010). "Fiscal Policy Reaction to the Cycle in the OECD:Pro-or Counter Cyclical?",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763.

- Giacomo Corneo, Hans Peter Gruner(2002). "Individual preferences for political redistribut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3*: pp.83-107.
- Goddard, R. D. (2003). "Relational Networks, Social Trust, and Norms: A Soical Capital Perspective on Student' chances of Academic Success".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25(1), pp.59-74.
- Grabka , Markus M. and Joachim R. Frick(2008). "The Shrinking German Middle Class: Signs of Long-Term Polarization in Disposable Income?," Weekly Report, DIW Berlin, *Germa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vol. 4(4), pp.21-27.
- Hagenaars, A., K. de Vos and M.A. Zaidi(1994). "Poverty statistics in the late 1980s: Research based on micro-data", Luxembourg: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Hebert et al.(2001). "Annual incidence of Alzheimer disease in the United States projected to the years 2000 through 2050", Alzheimer Disease and Associated disorders 15, pp.169-173.
- Henderson, A. et al. (2007). "Mandated community service in high school and subsequent civic engagement: The case of the "double cohort" in Ontario, Canada".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6*, pp.849-860.
- Horrigan, M. and S. Haugen(1988). "The Declining Middle-class Thesis: A Sensitivity Analysis", *Monthly Labor News 111*, pp.3-13.
- Jenkins, Stephen P.(1995). "Did the middle class shrink during the 1980s? UK evidence from kernel density estimates", *Economics Letters* 49(4), *Elsevier*, pp.407-413.

- Knack, S., & P. Keefer (1997).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4), pp.1251-1288.
- Korbin, J. & Coulton, C.(1997). Understanding the neighborhood context for children and families: Combining epidemiological and ethnographic approaches. in J. Brooks-Gunn, G. J. Duncan & J. L. Aber(eds.). Neighborhood Poverty. Vol. II.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Kumar, M.S. and J. Woo(2010). "Public Deb and Growth", IMF Working Paperm No. 10/174, IMF을 OECD Economic Outlook에서 제안용.
- La Porta, R., F. Lopez-de-Silanes, A. S., & Vishny. R.(1997). "Trust in Large Organiza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87(2), pp.1131-1150.
- Laubach, T. (2009). "New Evidence on the Interest Rate Effects of Budget Deficits and Debt",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Vol 17, OECD Economic Outlook에서 제인용.
- Lawrence, R. (1984). "Sectoral Shifts and the Size of the Middle Class", *The Brooking Review*, pp.3-11.
- Leeman, Y. & Ledoux, G. (2003). "Intercultural education in Dutch schools". *Curriculum Inquiry*, *33(4)*, pp.385-399.
- OECD(1995.10.). "Income distribution in OECD countries: evidence from the Luxembourg Income Study"
- OECD(2010). "Fiscal Consolidation: Requirements, Timing, Instrument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OECD Economic Outlook.
- OECD. Benefits and Wages: Country specific files http://www.oecd.org/els/social/workincentives
-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http://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 Oh, H., Labianca, G., & Chung, M. (2006). "A multilevel nature of group social capital".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1*, pp.569-582.
- Putnam, D. R. & et al. (2000). Saguaro Report: Saguaro seminar on civic engagement in America. USA: 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Havard University.
- Putnam, R.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eibert, S. E., Kraimer, M. L, & Linden, R. C. (2001). "A social capital theory of career succes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4(2), pp.219-237.
- Sparrowe, R. T., Linden, R. C., & Kraimer, M. L. (2001). "Social networks and the performance of individuals and group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492), pp.316-325.
-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in USA(2011), *Justification of Estimates for Appropriations Committees*.
- Thurow, L. (1984). "The Disappearance of the Middle Class", The New York Times.
- U.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http://www.budget.gov
- Warburton, J. & Smith, J. (2003). "Out of the generosity of your heart: Are we creating active citizens through complusory volunteer programmes for young people in Australia?",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37*(7), pp.772-786.
- Wolfson, Michael C. (1994), "When Inequalities Diverge," *American Economic Review,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vol.* 84(2), pp.353-58, May.

- Woolcock, M. (1998).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27(2), pp.151-208.
- Woolcock, M.(April 15, 1999). Social capital: The state of the notion. Paper presented at a multidisciplinary seminar on Social Capital: Global and Local Perspectives. Helsinki.
- Woolcock, M.(2000). *The place of social capital in understanding social and economic outcomes*. Proceedings of a symposium organised by OECD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Quebec City. March. World Economic Outlook, IMF, April 2010.

椋野美智子・田中耕太郎(2007). 『はじめての社会保障』. 有妻閣 牛鳴俊一郎(2009). 『中國における所得格差の擴大』. 東京経大学会誌 第249号。 大竹文雄(2006.9). 所得格差は拡大したのか. 學術の動向 麻牛太郎(2006). 日本の底力. 總裁選に向けた政策

- 總合研究開發機構(2006). NIRA政策レビュー. 總合研究開發機構.
- 中村吟子(2007). 『本學における一般教養に「ボランティア教育」を導入して』 (본학에 있어서 일반교양에 「자원봉사교육」을 도입하여). 東大阪大学短期大学部教育研究紀要, 4.
- 阪根健二(2006). 『學校ボランティア活動の實態と課題』(학교 자원봉사 활동의 실태와 과제). 香川大學教育實踐總合研究, 13.
- 片柳健(2001). 『マルチ・メディアの學園都市史 Part II: 14の大學による生涯教育で、IT時代をリードする「まちづくり」を通してヒトのココロを育て、市民意識を高める』(멀티미디어의 학원도시사II: 14개 대학에 의한 생애교육에서 IT시대를 리드하는「마을 조성」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키우고 시민의식을 높인다). 飯山論叢、18(2).

小林明子・酒井美和(2006). 『實踐的ボランティア教育プログラムと参加型學 習」試案: 大學生の主体性を引きだす教育實踐を通して』(「실천적 자원 봉사 교육 프로그램과 참가형 학습」시안. 대학생의 주체성을 세워주 는 교육실천을 통해서). 福井県立大学論集 28.